

조계종 각종 선거제도 '개선' 방향은?

# 현행보완·추대·직선제로 '가닥'

## 종회의장 법등스님 각계와 간담회 마쳐...9월 종회 앞서 공청회

“올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 관련선거 시비로 얼룩져 온 조계종 선거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지난 6월 11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시작으로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임 일승회·화엄회, 금강회,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본과위원장, 종정기관 소속 스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간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나 일승회·화엄

회 스님들은 선거인단 규모 '축소' (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의원)를 원했지만 종정기관 소속 스님들은 현행(중앙종회의원 81명+교구별 선거인단 240명)보다 '확대'를 원했다.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중앙종회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7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대로 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 △종교 집단의 특성 에 맞게 '추대' △보다 많은 중도들의 참여를 위한 '직선제' 등 3가지 안으로 선거법 관련 종회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 전문가의 손을 거친 뒤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 수렴도 할 계획이다.

교구본사 주지 선출과 관련 법등 스님은 “간담회 결과 80%가 추대를 원하고 있다. 대신 유명무실한 교구본사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재산처분이나 예산관계 등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도록 한다면 주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교구본사 주지와 운영위원장을 분리한다면 권력이 분산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등 스님은 “100% 문제점이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중앙종회의장 직책으로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공청회를 주최하자 일부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등 스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법등 스님은 “그런 의혹이 선거법 개정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공식 입장을 밝힐 용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20여 년 동안 종단 덕을 입은 만큼 종단이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9월 임시중앙종회에 대해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 법등 스님의 공약을 점검할 계기도 될 것”이라며 “총무원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임대 승인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기대'

## 천태종, 개성관광 '환영'...8월 北과 회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월16일 면담에서 개성관광 합의이후 영통사 성지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개성관광특구 개발사업과 천태종이 추진하는 영통사 복원 및 성지순례 행사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로 지역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현대아시아인 8월 15일 시범관광을 통해 관광에 필요한 숙소, 관광비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마칠 경우 영통사 성지순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태종은 연초부터 두차례

에 걸쳐 조선불교도연맹·북측 영통사복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복원불사가 마무리된 영통사 낙성식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추모하는 학술세미나, 영통사 성지순례 시기 및 횡수, 순례단 규모등을 논의해왔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개성관광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천태종도 8월경 북한측과 영통사 성지순례를 의제로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강원필수교재 '절요' 발간 조계종 교재편찬위

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무관)가 7월 11일 강원 2학년 사집반 필수교과목의 하나인 <절요>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법집법행록절요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는 당나라 규봉종밀 스님의 <법집법행록(法集別行錄)>에 보조지눌 스님이 자신의 의견을 편입하고 말미에 송나라 대해 선사와 간화선을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교재편찬위는 학인스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화 현대화 원칙을 세워 <절요>를 새롭게 개편했다.

# 통도사 산중총회 개최

## 내달 22일 방장선출 위해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집공고를 냈다.

이번 산중총회의 안건은 영축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 영축총림 임회회칙 개정의 건, 영축총림 임회회원 선출의 건이며 8월 12일부터 14일까지를 거주소 신고기간으로 공고했다.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도사 종무소에서 가능하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 제29기 행자교육원

## 내달 21일부터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은 제29기 행자교육원을 8월 21일~9월 12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7월 1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유나에 해인유원장 हे는 스님을 위촉했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08명 여행자 98명으로 총 206명이 인교를 신청했다.

조용수 기자

# 태고종 '에이엠에스'社 18억에 매각

신용카드 제조업체인 (주)에이엠에스는 최대주주인 (제)한국불교 태고원 보유 주식 17만9650주(9.6%)를 신용호씨에게 넘겼다고 18일 공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인수 대가로 18억원을 지불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태고원은 지난해 9월 24일 에이엠에스 지분 12.33%를 지병규씨와 함께 인수했다.

김원우 기자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류상태 실행위원(왼쪽 앞)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팀장이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청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 “종교수업 더이상 강요말라”

## 종자연 등 교육청에 '시정 명령권 발동' 요청

서울 대광고의 종교 수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권진관 등, 이하 학자연)이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원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과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은 이날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5분 예배 폐지 △수업일 확대에 예배 개편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권 발동을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前 대광

고 교목실장)은 “더 이상 학생들이 종교문제로 학교에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종교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위해 달라”고 강조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은 “대광고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종교편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인규 장학사(교과과정 담당)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두 단체에 공식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 행자교육기간 2년으로 확정

## 조계종 승개추, 종단지정 시설에서 교육키로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법·이하 승개추)는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갖고 행자교육 연한을 2년으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조계종의 행자교육은 출가사찰에서 출가자로서 지나야 할 위와 불전익식, 참회와 발심, 불교적 가치관 등을 습득하고, 최종 3주간의 집체교육(행자교육원 입교

으로 사미(尼)계를 수지해왔다. 그러나 출가자로서 초발심을 돈발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기초교육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 5개월+집체교육 3주'후 사미(尼)수계를 받던 기존 제도 대신, 입산 후 종단에서 지정한 별도 교육시설에서 2년 간 행자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장 행자교육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승개추 내 법제본과(위원장 영배)와 지도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종무회의에서 제도개선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중앙종회에 관련법 개정을 상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 400명 수준인 행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설행자교육원 시설 마련이 급선무다. 2년 간 8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설 남·여 행자교육원을 새로 신축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승개추는 각 400명씩 수용 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200명씩 수용하는 시설 2곳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800명을 기준으로 15명당 1명꼴로 필요한 교구사는 최소 54명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의 안정적 수급과 신분보장, 인건비, 시설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것도 승개추가 풀어야 할 숙제다.

승적업무처리령 예고 8월26일까지 의견수렴

조계종이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종령 제정을 앞두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직 절차 △승적기재 사항 변경, 추가 절차 △법명개명 절차 △승적제정 및 추가기록 절차 △승적조회, 열람 절차 △승적 증명발급 절차 등이 있다.

이 중 “법명개명은 승적부에 등재가 잘못된 경우나 승려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명 신청할 수 있으며, 법명개명신청은 2회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눈에 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은 “승적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해 승적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영축총림 대중스님께 드리는 글

영축총림 방장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총림에는 방장유고에 따른 대중공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총림법흥은 수좌가 상생해야 한다. 총림은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총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중총회가 되어야 한다. 조속히 산중총회를 통해서 방장후보자의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 이었습니다.

또한 방장선출의 근거가 되는 산중총회의 방식도 대중공사, 산중총회의 등의 산중총회를 모으는 방식이어야 방장의 지명도 구성된 임회가 산중회의 대표성이 될 수 없기에 임회에서 방장선출을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통도사가 방장, 주지, 임회의 의사결정만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대중의사 수렴이라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고, 문중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축총림은 종현·종법이 규정하는 제도적 정비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직도 총림법에 의한 방장후보자 선출, 임회회칙 개정, 임회회원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본사주지의 임기가 만료되어 갈에 따라 차기주지 추천문제가 종현·종법을 위해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법은 총림현안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통감하고, 아래의 내용과 일정으로 총림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8월 22일 산중총회를 개최하여 방장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간 두 차례의 총림공사를 통해 산중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산중의 뜻이 여법한 추대로 모아지지 않아 결성을 통해서라도 방장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였지만, 방장선출이라는 총림공분 보다 차기 총림주지 선출에 관한 문중이기에 의해 산중총회는 의도적으로 무산되어 왔고, 그로 인한 결과는 총림혼란과 총림존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기에 조속히 방장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회회칙을 개정하고 임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총림법에서 각 총림은 임회회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임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영축총림은 시행 총림법에 준하는 회칙개정과 임회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무소는 그동안 산중내에서 개진해온 의견취합을 통해 총림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 11장 64조의 개정회칙을 기초하였고, 임회회원 선출과 임회구성을 통해 총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회회칙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임회가 인사규정과 후생복지 등 총림의 중요종무를 협의 의결하는 총림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제2장 직제**는 총림법 직제로 구성되어 수행기관별보(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산중총회**는 영축총림의 대의기구가 되도록 하였고, **제4장 임회**는 총림법에 의한 회원구성과 자격으로 하였고, 총림 종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중요사안에 대하여 임회가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상임위원회**는 임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제6장 원로위원회**에서는 총림에 원로원을 설치하여, 원로위원은 방장이 위촉하고 총림직제의 수좌가 되어 대중을 통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로자격은 본사주지, 중앙종무기관장 등 중요요임을 역임한 승남 35세 이상으로 하였고, 원로권함으로써는 통도사 주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인사**에서 본사주지는 원로원이 주지후보자를 방장에 게 추천하고 방장은 임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추천토록 하였고, 주지인기는 4년으로 하였습니다. 말사주지는 본사주지가 임회의 임명동의와 방장재가를 얻어 총의하도록 하였고, 본사주지를 역임한 재직승은 총림관할의 말사·임의 주지 및 감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교육**에서는 비구계를 수지한 재직승이 전문과정을 이수할 시 총림이 연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장 포교**에서는 영축총림 교구편찬을 위하여 전국에

포교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포교당 설립 시 총림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장 후생**에서는 비구계를 수지한 재직승이 장기입원 시 총림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축총림 장례규정도 두어 총림대중이 수행과 전념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쳤습니다.

**셋째, 보광선원을 이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림의 대표적 수행기관은 보광선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광선원은 수행의 요체가 되는 선원의 수행환경으로서는 협소하고, 총림행사와 관람객들의 소란행위로 인해 수행처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광선원이 총림선원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광선원을 옛 일승암터로 이전 신축하여 논 푸른 남자들의 선별장다운 정진처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원의 수행환경 수호와 총림선원의 근본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에 보광선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광전을 원로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도사에 원로와 중진스님들의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총림에 위기가 있었을 때도 어른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총림 중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원로의 참여가 제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축총림은 원로를 중심으로 총림운영체계를 세워 총림운영의 주체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림 원로스님들이 도제양성과 총림발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보광전에 원로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민중정신문화의 수도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통도사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지는 적령보궁입니다. 그리고 수천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이 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전 국민의 문화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사람은 전법과 포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일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남불교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천 년의 불지종가가 되어 왔던 통도사가 국민정신교육과 민족교육을 위한 도량이 되어 개산의 큰 뜻을 찾고자 합니다.

**종합하는 영축총림 대중 여러번**

급변 총회안건은 방장후보자 선출과 임회회칙 개정 및 임회회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입니다. 총림법에서 임회는 총림직제의 장과 본사 중앙종회의원,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3인은 당면직이고, 선출직은 승남 25세 이상 재직승으로, 교구총회에서 11인에서 15인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22일 산중총회에서 방장후보자와 직선 임회회원을 선출하여 본 총림의 의사결정기구인 임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회회칙 개정안이 명시되어 있는 총림법전을 위한 제도적 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현행하여 총림대중의 결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종무소는 총림체제와 운영구조를 제도적으로 이루고자 운영조례인 회칙 개정조건과 총림법시를 기초하여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은 대중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총림대중의 결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함으로 아직은 많은 논의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림의 주요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없기에 본 법의 임기 내에 총림정신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림이 요구하고 총림이 가야하는 길에 총림대중도 함께하여 총림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결단으로, 영축총림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봉장으로서, 민족정신문화를 선창하는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산중총회 참여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9년 7월 25일

#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